

“판결 승복 대국민 약속을” vs “없는 죄 만들어 억지 기소”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선거법 2심 오늘 판결

국민의힘 “피선거권 박탈형 예상
장외투쟁 중단, 국회로 돌아와야”

민주당 “기억 처벌, 납득 어렵고
낙선자만 처벌, 형평성에 어긋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며 공세를 끌어올리는 반면,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무죄 주장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은 지난해 11월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의원직 박탈형으로, 해당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을 잃는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20대 대선 당선을 목적으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인터뷰에서 발언한 것을 유죄로 선고했고,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유죄로 판단했다.

국민의힘은 공개 석상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아스팔트로 나선 이유는 현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때문만



권성동 (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시스

은 아니다. 26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이 있기 때문”이라며 “(이 대표는) 이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이정도 형량이면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 역시 항소심 판결이 이재명 대표의 정치생명과 직결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내부의 비명세력을 억누르기 위해 선제적으로 극단적인 장외투쟁에 돌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26일 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해야 한다”며 “그리고 대규모 소요 사태를 부추기는 장외투쟁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 이것이 바로 내전 종식의 첫걸음”이라

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이 대표가 항소심 결과를 승복하지 않고 장외투쟁을 강화할 때에 대책이 있느냐는 물음에 “대한민국은 권력 분립 국가이고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 뿐”이라며 “결정이 나오면 불복해서 안 되고 대한민국이 그렇게 간단한 나라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같은날 위례·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했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 관련해선 말을 아꼈다. 대신,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에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



전현희 등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위원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에 대한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시스

없는 죄를 만들어 억지 기소를 했다. 기억을 처벌하려는 시도는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공직선거법을 포함한 어떤 법률도 특정한 행위가 아닌 기억을 처벌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은 이 대표가 하지 않은 발언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거짓말을 한 것처럼 조작했다”면서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선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발언 내용을 왜곡해 허위 발언으로 몰아갔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양형기준 상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선에서 당선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추되지 않는 반면, 낙선자만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부당하다”면서 “또한, 해당 발언들은 선거일로부터 70~140일 전에 이루어

진 것으로 선거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문기 관련 발언은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안이 아니며, 백현동 발언은 국정감사에서 나온 것으로 선거와의 관련성이 없다”며 “공직선거법의 목적은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는 것인데도, 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판결로, 선거 과정에서의 자유로운 정치적 발언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한편, 이번 항소심에서 의원직 박탈형이 유지될 경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증폭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장기화 됨에 따라 민주당 내부에서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는데, 비명(비이재명)계에서도 항소심 결과에 따라 보폭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만장일치’ 조율중?... 선고 내달로 넘어가나

현재 ‘尹 탄핵’ 변론종결 한달

의견 갈리면 국민분열 조장 우려
재판관 이견조정 시간 걸리는 듯
이번주 선고 어려울 것 전망 우세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지 한달째가 되는 25일, 현재는 여전히 선고기일을 예고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선고가 이번주를 넘겨, 4월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마지막 변론 이후 이날까지 한달째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재판관들은 다른 사건의 변론·선고 등 특별한 일정이 없을 때는 매일 평의를 열고, 주말에도 자택 등에서 사건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24일)에도 재판관들은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에 대한 기각 결정을 내린 후, 1시간 가량 평의를 가졌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 최종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2주가량 걸렸기에, 정치권이나 법조계에서는 이달 둘째주나 셋째주에 선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예상보다 선고가 늦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재판관들이 이견을 조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고 있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뉴스시스

석이 나왔다.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의 의견이 갈리면, 국민분열을 조장한다는 우려에 ‘만장일치’를 조율 중이라는 설명이다.

거기에는 ‘선입선출(先入先出)’ 원칙을 지키겠다고 하던 현재가 윤 대통령보다 나중에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먼저 하자, 야권에서는 현재 내 기류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번져나갔다.

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미리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 한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들의 의견이 나뉘었다. 또 판결문을 살펴보면 현재는 한 총리의 ‘내란 가담’ 행위와 관련해 ‘가담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뿐,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헌법적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선고는 이번주 내에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총리는 24일에 선고했고, 27일은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 일반 사건의 정기 선고가 예정돼 있다. 정기 선고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에 이뤄진다.

현재가 이를 연속 선고한 것은 1995년 한 차례 뿐이며, 한주에 3번 이상 선고한 적도 거의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28일 선고는 희박한 것 아니냐는 설명이다. 만일 현재가 오는 26일에도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사실상 내주로 넘어간다. 현재는 통상 2~3일전 선고기일을 통보해왔기 때문이다.

이번주를 넘기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4월 초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문형배 현재소장 권한대행(재판관)과 이미션 재판관의 임기는 내달 18일 종료되기에, 법조계에서는 늦어도 그 전에는 선고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만일 두 재판관이 퇴임하게 되면 현재는 ‘6인 체제’로 운영되고, 탄핵심판 결론을 내리기 어려워진다.

한편 전날 한 총리의 직무 복귀를 목격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역시 복귀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은 현재 선고를 기다리며 최대한 입장을 자제하고 있다. /서예진 기자 syj@

글로벌 통상전쟁·마은혁 임명 등 시급

한덕수, 세달만에 직무복귀

“관세폭풍 헤쳐 나가는데 모든역량
목전 닷친 민생위기 숨통 틔우기에
여야 막론하고 적극 협의 하겠다”

87일만에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앞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야기한 통상전쟁, 그리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가 놓여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가장 시급한 현안은 글로벌 통상전쟁이다. 한 권한대행이 직무정지된 사이,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은 점점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또 한 권한대행이 직무정지된 동안,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행을 맡았지만 미 행정부 수뇌부와 통화를 하지 못했다. 미국방장관의 첫 아시아·태평양 국가 순방에 한국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앞서 바이든 행정부 말미에는 ‘민감국가 지정’ 리스트에도 올라가기도 했다. 전반적으로 한미관계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이에 한 권한대행은 이날 직무복귀 후 첫 국무회의에서 “그간 통상과 외교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발 관세 폭풍을 헤쳐 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소명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통상전쟁으로부터 국익을 확보하며 국회와의 협치를 통해 당면한 국가적 현안에 대한 해법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라며 “국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전에 닷친 민생 위기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적극 협의하겠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으로 침체된 내수 회복도 과제다.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를 해왔지만, 정국이 경색되면서 공전 중이다. 우선 여야는 추경 규모와 지원책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당시 권한대행이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임명하지 않으면서, 국회가 정부 측을 국정협의체에서 제외한 것도 공전의 사유로 꼽힌다.

결국 여야의 대립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리려면 마은혁 후보자 임명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현재가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와 관련해 ‘위헌’이라고 지적했기에, 야권에서는 즉시 임명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임명을 지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예진 기자